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관세청

정부 3.0 협업 우수사례집

Ye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검정관리본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관세청

정부 3.0 협업 우수사례집



Ye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책을 내면서



정부3.0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금년에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축한 정부3.0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정부3.0 선도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실질적인 정부3.0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비전 선포 이후 관세청의 4,600여 직원들은 정부3.0 패러다임 하에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낡은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공정보를 과감히 개방하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지 않은 우수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관세청 정부3.0 협업 우수사례집’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부터 우리청이 추진해온 주요 협업사례를 모은 것으로, 수출입 현장에서 관세청이 성과를 창출한 21건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해 12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성공사례와 올해 7월 정부3.0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입가격 공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3.0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하고 또한 관세청을 포함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는 자체 혁신활동에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정과 학습으로 정부3.0에 앞장서 주신 전국의 4,600여 관세공무원 여러분과 안전행정부 등 관세청의 정부3.0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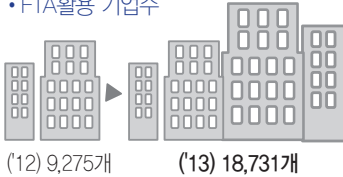
2014.10
관세청장 김낙희



✓ 11:11

- 수출입 단일창구 38개 기관으로 확대
- 기업간 원산지증명서류 교환전산망 구축
- FTA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로 FTA 활용 컨설팅 제공

• FTA활용 기업수



➤ **1** 세계 1위

- ▶ 세계은행(World Bank) 통관환경 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13.9월)
- ▶ 국제공항협회(ACI) 국제공항 세관 만족도 평가 9년 연속 세계 1위(14.1월)
- ▶ 「국제청과 탈세정보 공유」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1위(13.12월)
- ▶ 국가통계 발전 유공 대통령상(13.9월), 2013년 올지존콘 대통령상(13.10월)
- ▶ 「수입가격 공개」로 정부3.0 우수사례 홍보 경진대회 1위(14.7월)
- ▶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14.9월)
- ▶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유공 대통령표창(1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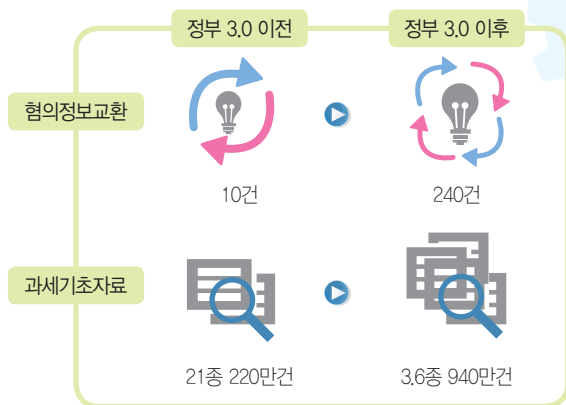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01:13

- 수출입통계 DB 등 **113**종 데이터 개방
- FTA 무역통계, 립스틱·유모차 등 생활밀접품목 수입원가·판매가격 공개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180종 사전 공개

13:00

- 국세청과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과세기초자료 공유범위 확대



➔ **1,300**억원 세수증대 효과

6:08

- 복지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과 정보공유

➔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 등 **608**억원 정부재정 누수방지

Contents



부처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 |
|----|---|----|
| 01 | 관세청이 드디어 발 벗고 나섰다! 수입가격 공개로 수입품 판매가격 거품 제거 도전! | 08 |
| 02 | 국제우편을 통한 특송물품 환적사업 추진으로 연간 3,600억원 이상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 14 |
| 03 | 수출입 요건기관과 단일한 요건창구 구축 한번의 신고로 통관OK, 세계로 확산 | 18 |
| 04 | 머리부터 발끝까지 YES FTA 맞춤형 서비스 | 24 |
| 05 | 고교생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의 문 서울세관이 열어드려요. | 30 |
| 06 | 해외여행 정보 투어패스 하나로 끝!! | 38 |
| 07 |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텍스리펀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44 |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정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08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만 있으면 이제 담배 불법유통은 끝! 48
- 09 수입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 54
- 10 힘을 모아 탈세 및 체납 물리치자. 60
- 11 촘촘해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이제 원산지 세탁은 위험한 도박! 66
- 12 관세청과 국세청이 손잡고 역외탈세를 차단합니다. 74
- 13 공공재원 부당수급 근절을 통한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수혜 확대!! 78
- 14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로 안전하고 편해지는 공항 출입국 82
- 15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해외불법·우회덤핑 걱정 없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켜갑니다. 88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6 수출기업의 구원투수, '세계HS정보시스템'과 'HS국제분쟁신고센터' 94
- 17 저렴한 병행수입물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국민이 함께합니다. 100
- 18 관세포탈 고액 체납정리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106
- 19 도난차·압류차 등 문제차량 밀수출 스마트폰 앱(App) 하나로
원천 차단 112
- 20 항공물류의 병목현상 관세청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116
- 21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민·관 협력으로 해외직구 불법물품 차단 120



백화점에서 팔리는 고가의 수입 립스틱,
수입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관세청이 드디어 발 벗고 나섰다! 수입가격 공개로 수입품 판매가격 거품 제거 도전!

해외판매가 vs 국내판매가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모씨. 해외에 나간다고 하자 주변 친구들이 A사의 인기 화장품을 사달라고 졸랐다. 선뜻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사준 후, 우연히 백화점에 들러 판매가격을 확인한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백화점에서 1개 살 돈으로 해외에서는 같은 제품을 무려 4개나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모씨는 다음 해외여행 갈 땐 나도 여러 개 사와야겠다고 다짐했다.

백화점 화장품 수입코너에서 팔리는 립스틱의 수입 원가는 얼마일까? 놀랍게도 2만 1천원에 팔리는 립스틱의 평균 수입가격은 고작 1천 4백원이다. 수입가격보다 무려 15배 정도 뺏튀기가 된 가격이다. 수입 립스틱의 평균 수입가격은 1천원에서 1만원대까지 다양하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3만원~4만원정도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주요 10대 품목 수입가격 공개

이런 가격 부풀리기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관세청이 나섰다. 지난 4월 8일, 관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10개 공산품 및 가공품의 분위별 평균 수입가격, 최고·최저 수입가격, 국내 판매가격, 유통구조 분석 등을 발표했다.

〈립스틱의 가격공개 예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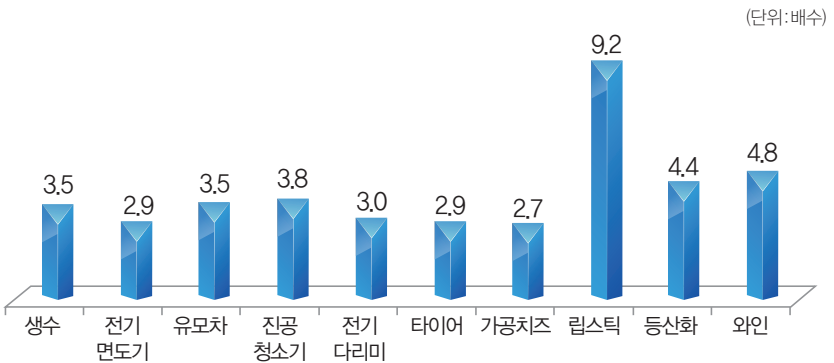
| 최고·최저 수입가격 | 분위 | 분위별 수입비중 (%) | 분위별 평균 수입가격 | 주요 상품(2~3개) 평균가격 | | | |
|-----------------|----|--------------------|-------------------|------------------|---------------|-----------------|-----------------------|
| | | | | 평균 수입가격 | 평균 국내 판매가격 | 판매가/ 수입가 (배) | 평균 '판매가 / 수입가' (배) |
| 31,156 ~ 122 | 1 | 16.9 | 10,436 | 8,855 | 39,500 | 4.46 | 9.18 |
| | 2 | 17.9 | 7,537 | 8,028 | 40,000 | 4.98 | |
| | 3 | 14.5 | 4,107 | 3,144 | 35,000 | 11.13 | |
| | 4 | 50.7 | 1,668 | 1,423 | 21,150 | 14.87 | |

* 10개 품목의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 평균 비율



이 자료에서 10개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평균 최대 9.2 배 높다. 또한, 와인의 경우 평균 4.8배, 등산화는 4.4배, 유모차도 3.6 배 비싸다.

공개한 10개 제품은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 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모두 서민생활과 밀 접한 품목이다.



유통과정에서 생긴 가격거품

하지만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엄청난 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저가의 수입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격 거품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유통구조의 독과점적 성격 때문이다.



* 수입 유모차의 독점적인 유통구조

예를 들어, 유모차의 경우 브랜드별 독점적인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후, 제품별로 특정 공급업체에 의해 백화점에서 판매된다. 이렇게 유통구조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질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시장경쟁이 아닌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결국 일부 제품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에 비해 제품을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왜곡된 시장구조가 형성된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

이런 가격 부풀리기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비싸게 팔리는 물품이 무조건 좋은 물품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해야한다. 그래야 국내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가격 부풀리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 제공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가격거품!! 너의 정체는 이미 밝혀졌다!!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 수입가격 공개로 깊이고 편리하게!

수입 소비재,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지표상 수입 개방도는 높지만 주요 소비재의 경우 외국에 비해 10~40%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

| 국가 | 수입 개방도 (%) |
|----|------------|
| 한국 | 100 |
| 미국 | 60 |
| 일본 | 70 |
| 호주 | 42 |

| 국가 | 수입 개방도 (%) |
|----|------------|
| 한국 | 100 |
| 미국 | 80 |
| 일본 | 70 |
| 호주 | 72 |

그렇다면 관세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관세청과 소비자 단체는 수입·판매 가격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유통과정의 불리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 수입소비재 품목 | 평균 수입가격 | VS | 평균 국내판매가격 | 수입가대비 판매가 |
|----------|----------|----|-----------|-----------|
| 유모차 | 131,628원 | VS | 569,500원 | 4,33배 |
| 진공청소기 | 66,847원 | VS | 294,000원 | 4,40배 |
| 전기면도기 | 65,979원 | VS | 223,650원 | 3,39배 |
| 등산화 | 22,560원 | VS | 169,000원 | 7,49배 |
| 와인 | 19,372원 | VS | 110,000원 | 5,68배 |
| 립스틱 | 1,423원 | VS | 21,150원 | 14,87배 |

※ 품목별 대표상품(2~3개)의 평균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수입 소비재, 수입 가격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 | |
|----------------|----------------|----------------|
| 01 합리적 소비가치 제공 | 02 수입품 가격인하 유도 | 03 국내유통구조 개선유도 |
|----------------|----------------|----------------|



국제우편(EMS)
환적사업 추진

값싸고 편리한 우리나라 국제우편(EMS)을
해외에서도 이용한다면 깜짝 놀랄걸!

국제우편을 통한 특송물품 환적사업 추진으로 연간 약 3,600억원 이상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전자상거래 급증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약 1,116만건에 10억4천만달러 정도로 3년 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섭게 커지고 있다.

* 국가 간 전자상거래 금액 : 213억달러('00년) → 1,706억달러('10년) <삼성경제연구소>

이 중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상당수가 전자상거래 물품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국제특급우편(EMS) 반입건수는 무려 약 157만 건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싱가포르 우정사업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CJ대한통운과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아시아 전자상거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패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

한편, 미국이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주도해 온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

장의 패권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1990년대 초 아마존과 이베이 등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등장한 뒤 지난해까지 미국은 전자상거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2013년,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월스트리트저널 '13.12.20. 보도). 이러한 국제적인 물류흐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환적물류를 유치하는 등 물류허브 지원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관제도는 수입통관 관리가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환적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를 구축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수입통관 관리 위주에서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적물류 신규 유치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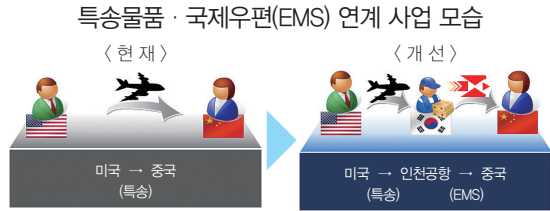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창출을 엿보다.

관세청은 지난 2월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송과 국제우편(EMS)이 연계된 신개념 환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 간에 직접 배송되는 특송물품을, 물류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국제우편(EMS)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에 배송하는 제도다. 국제 특송 화물 처리절차와 국제우편물 처리절차를 결합한 신개념 화물운송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특송화물로 직접 운송

하는 대신, 미국에서 화물운송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한다. 그리고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국제



우편(EMS)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제우편으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미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것보다 물류비용이 최대 60%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한 인천공항 물류허브* 지원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특송과 국제우편이 연계된 환적화물 처리절차를 마련했다. 또 국제우편(EMS) 환적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 19일부터는 실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 (발송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 유럽 → (환적) 인천공항 → (도착국) 중국 동남아 러시아 일본 등

이런게 바로 창조경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약 300만건 이상의 신규 반출입 물량 이 들어온다. 그 결과로 약 3,6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익과 1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우정사업본부 추정)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계속 발굴할 것이다. 또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부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번의 신고로
통관OK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세관의 업무처리는 빨라졌는데 기업의 체감 물류시간은 제자리?
요건승인기관과 세관간의 정보의 원활치 못한 소통이 문제

수출입 요건기관과 단일한 요건창구 구축 한번의 신고로 통관OK, 세계로 확산

무역 1조원 시대가 지난지가 언젠데 물류비용은 제자리?

지난 20년간 무역규모는 10배가 증가했고, 글로벌 무한경쟁은 점점 심해졌지만 세관인력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도 신속하고도 안전한 통관행정을 위해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개발하였다. UNIPASS의 개발로 세관의 통관소요시간은 수입 1.4시간, 수출 2분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통관소요시간과는 차이가 있었고, 여전히 기업의 물류비용은 높은 수준이었다. 세관의 통관절차 자체는 신속해졌지만 통관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를 수입하는 기업은 통관을 위해서 식약처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 합격증을 받고, 또 검역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역합격증을 받은

뒤 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을 할 수 있었다.

즉, 요건을 받기 위해 종이서류를 들고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 만큼 수출입 통관은 지연되었고 곧 기업의 물류 지체와 물류비용은 증가했다.

관세청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번거로운 방문 없이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수출입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결과 Single Window를 만들었다.

한번에 수출입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싱글윈도우

싱글윈도우는 UNI-PASS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확인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요건신청 뿐만 아니라 요건확인 결과까지 자동으로 UNIPASS에 전송되어 세관에서 바로 심사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2004년도 8개 기관과 업무협의를 시작한 후 점점 많은 기관과 연계해 나갔고, 현재는 38개 요건확인기관이 함께 SW를 사용하고 있다. SW에 연계된 기관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을 받기 위해서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UNIPASS 시스템상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SW 도입 당시에는 활용률이 낮아서 해당되는 신고건의 4.6%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활용률이 점차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98%까지 올라와서 해당 신고건 대부분이 SW를 활용하고 있다.

싱글윈도우 구축으로 물류처리시간이 10일에서 2일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또 물류비용도 1,800억가량 절감했고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도 미국보다 낮아졌다.

SW를 통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수출입기업에게 비용 절감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관세청의 싱글윈도우 시스템은 물류비용 절감, 신속통관의 효과를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아서 에콰도르와 같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정부 3.0시대에 걸맞는 싱글윈도우 3.0

부처간의 협력, 시스템 결합을 통한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싱글윈도우가 2013년에는 정부 3.0을 만나 싱글윈도우 3.0으로 더 새롭게 태어났다.

새정부 출범 이전의 싱글윈도우는 비록 협력, 공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정부2.0과 정부3.0이 혼재되어 있는 2.5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 3.0 수준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반영하여 싱글윈도우 3.0로 진화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창의 가치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HS 코드 품명, 용도 표준화 사업이다. 현재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관과 검역기관(식약청, 검역본부등)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정보의 연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식약처 기준으로 소간, 꼬리, 편도는 모두 같은 HS코드로 신고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검사결과가 세관으로 전송되어도 일일이 품명을 세관직원이 확인하여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표준화사업 이후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전산에서 바로 검사결과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여 양기관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출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용선을 이용한 EDI방식에서 탈피하여 인터넷망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폐쇄되어있는 EDI 방식과 달리 인터넷 기반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또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극대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을 통하여 손쉽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단 한번의 제출로 각종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전자서고를 만들고 있다.

싱글윈도우 수출을 통한 행정하류 범 조성

관세청은 이제 공유, 소통, 협력, 개방의 정부3.0 가치를 세계화하고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해외수출 확대로 우리의 통관시스템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국가 간 성실수출입업체의 상호인증 확대로 국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글로벌 싱글윈도우의 새 장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3.0의 가치를 접목한 관세청 싱글윈도우가 해외로 뻗어나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눈높이맞는 맞춤형지원

관세청은 시시각각 변하는 대외 통상현황에 맞게
FTA 활용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계 품목분류·세율 정보 제공

수출 상대국의 품목분류(HS), 관세율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FTA 활용지원 맞춤형 컨설팅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 컨설팅하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FTA 전문인력 구인 · 구직 연계

FTA 전문인력에 대하여 FTA구인 기업과의 고용 연계(Job-matching)를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FTA, 정말 잘 활용하고 싶는데 준비 단계부터 어렵더니,
수출을 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잘 되었는지 걱정되지요?
관세청 YES FTA 종합솔루션으로 해결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YES FTA 맞춤형서비스

말로는 FTA시대인데,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FTA는 국가 간의 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증대의 기회를 극대화 시킨다. 그리고 세계의 무역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거대 성장축이라는 사실을 기업, 국민, 국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처가 FTA에 대해 막대한 홍보와 지원책을 쏟아 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EU 슬로바키아에 현지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기업 A가 한국의 B사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0%)의 사후적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B사가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서 증빙의 필수요소의 하나인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는 등 원산지증명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슬로바키아 세관이 연 44억 원 상당의 FTA 특혜를 부인하였다.

게다가 한국산 물품에 대해 빈번한 사후신청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슬로바키아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여러 상품에 대해 약 3,970건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였다.

상황이 급박해진 A사는 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그 즉시 관세청은 'FTA 활용으로 대응팀'을 가동하고, 수출기업인 B사를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의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가 원산지관리에 미흡하여 발생한 단순오류로 파악되었지만,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방문했다. 또 원재료 수불과 원산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완제품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이었다.

현지 수입기업과 KOTRA 현지공관을 방문하여 엄청난 검증을 요청한 현지 세관의 업무관행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보니 빈번한 사후검증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의심을 갖고 있었다. 검증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까지 컸다. 이러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지대사관의 측면지원도 요청하였다.

관세청은 서둘러 보통 10개월이 걸리는 원산지 검증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접수 후 4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결과를 슬로바키아 세관에 보냈다. 동시에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상대측에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하고, 해당물품에 대해 신속한 환급을 요청하는 공식서한까지 미리 보내게 하였다.

그 결과로 검증을 요청한 물품의 약 80% 이상이 환급되었으며,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 환급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냈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현지 한국대사관, 현지공관, 현지

기업 및 현지 세관까지 와서 효율적인 협업행정을 펼친 최초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다만, 44억 원의 관세는 환급받았으나, 계속되는 원산지검증 요청은 어떻게 할까?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을 지연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이 늦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관세청은 실질적인 이행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업무특성에 맞춰 원산지관리에서 해외애로까지 「YES FTA 종합솔루션」 맞춤형 지원체제를 개발했다.

최초의 신속한 원산지확인을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로, 신속·정확한 원산지판정·유통은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발급기관간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상대국의 의심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조회시스템으로, 해외애로 발생 시에는 해외기관간 협업 대응팀으로, 정부3.0 가치에 맞는 기업·기관·정부·해외까지의 협업체계를 완성했다.

관세청은 FTA 지원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간의 관세장벽을 제거하여 수출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FTA 특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모든 FTA 활용 문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YES FTA 종합솔루션」으로 명실공히 FTA 강국을 향해 특급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어려운 FTA 활용, FTA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열어드립니다

관세청은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FTA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FTA 활용 준비부터 해결까지
완벽히 지원해 드립니다.



FTA

세계 품목분류 · 세율 정보 제공

수출 상대국의 품목분류(HS), 관세율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FTA 활용지원 맞춤형 컨설팅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 컨설팅하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FTA 전문인력 구인 · 구직 연계

FTA 전문인력에 대하여 FTA구인 기업과의 고용 연계(Job-matching)를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www.customs.go.kr

“맞추어 드립니다”

FTA 활용, 힘드셨나요?

이제 관세청의 완벽한 FTA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01 세계 품목분류 · 세율 정보 제공
수출 상대국의 품목분류(HS), 관세율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03 FTA 활용지원 맞춤형 컨설팅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 컨설팅하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02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04 FTA 전문인력 구인 · 구직 연계
FTA 전문인력에 대하여 FTA구인 기업과의
고용 연계(Job-matching)를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취업의 문
서울세관이
열어드려요



FTA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도 살리고

고교생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의 문 서울세관이 열어드려요.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주무부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꼭 일자리 관련 부처만 할 수 있는 일일까?

결론만 말하면 그렇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는 일자리 관련 부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정부 3.0의 시대인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서울세관은 특성화 고교생, 경력단절 여성을 FTA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과 이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과 교육의 주무부처가 아닌 세관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심적인 힘은 단연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민관협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 3.0의 전략이다.

서울세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로부터 시작한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기업이 특혜세율을 활용한 성장의 기회가 마련되었음에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낮다.

그 원인을 파헤쳐보니, 중소기업은 FTA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FTA

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고용시장에 FTA 전문 인력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졸 전문 인력 중 FTA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을 가진 자도 많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바라보는 취업의 기준이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금, 복지 수준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경력단절 여성에 눈길을 돌렸다.

우선 고교생, 경력단절 여성을 FTA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했다. 관세청은 FTA 협정에서 정한 유일한 FTA 집행기관이다. 서울세관 역시 FTA 활용 지원부터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 등 다년간의 FTA 집행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FTA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문성을 교육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등 고교생과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찾아가 각 기관이 가진 교육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부정하게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마약과 같은 반사회적 물품을 조사하는 세관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니. 각 기관들은 난처해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이 운영하는 FTA 상설교육센터에서 기업 실무자들이 교육하는 모습과 FTA 활용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기업의 FTA 활용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결국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서울시 교육청과는 MOU를 체결('14.8)하는 등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특성화 고교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우는 무역관련 과목의 이수여부에 따라 기본과정, 전문과정, 자격취득과정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총 599명을 FTA 전문인력으로 키웠다. 또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전 담당했던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회계, 전산 등 사

무교육과 FTA 교육을 병행하여 28명을 FTA 실무인력으로 키웠다.

이와 더불어 FTA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서울세관 관할구역을 서울·경기·충남·충청·강원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과 순회설명회 개최했다. 각종 박람회에 참여해 세관의 FTA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실제 FTA 전문 인력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FTA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서울세관은 고교생과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연속 개최하고 FTA 일자리 창출을 위해 뛰어다녔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사무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법인과의 취업박람회를 개최(6.26)했다. 그 결과 2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FTA 교육을 이수한 특성화 고교생에게는 정부부처 합동 고졸성공 취업박람회(9.2)에 참여시켜 130여개 기업과 면접기회를 제공했다. 안타깝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은 서울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잡매칭 행사를 개최(9.18)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런 기회로 올해 말까지 고교생 150여명의 취업성공을 예상한다.

정부 3.0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능 Key!

서울세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용, 교육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관이 정부 3.0의 틀 안에 부처 간 협업과 맞춤형 서비스로 중소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분야의 부처가 같은 방법으로 행정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부 3.0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의 끝에 실업해소를 국민행복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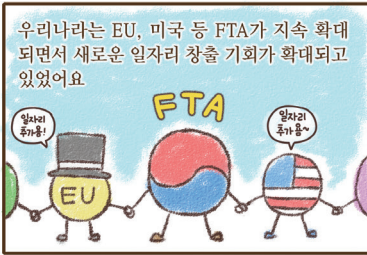
(관세행정 3.0 우수사례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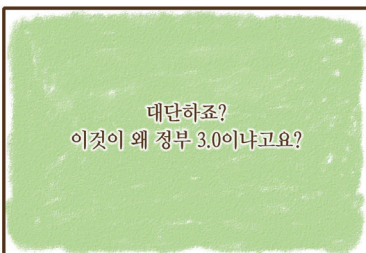


정부 3.0 관세청이 할게요. 느낌 아니까~

-새로운 FTA 일자리가 생겼어요-









made by 관세청 대변인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여행도움미 투어패스



해외여행 이거 하나면 끝!

해외여행자에 필요한 세관, 출입국 등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Tour Pass

1 **세관안내**

여행자 휴대품통관, 예상세액조회 등 세관업무 정보

2 **출입국 절차**

출입국 심사, 사증(MSA) 및 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에 대한 정보

3 **검역**

승객, 승무원 검역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검역정보



4 **여권/비자**

여행권보지역, 비자 및 영사센터 등 정보

5 **항공 스케줄**

인천공항 항공사 입출국 운항 스케줄 조회

6 **유실물 조회**

공항 보세지역 내/외에서 유실된 물건 검색 제공

스마트폰에서 **NAVER** 투어패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투어패스
(Tour-PASS)

: 이외에도 나라별 휴대품통관정보, 공항면역/실 등 총 11가지 카테고리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정보 찾으려고 인터넷 창을 몇 개나 띄워야 하는거야?
한꺼번에 다 알려주는 편리한 사이트 없나?

해외여행 정보 투어패스 하나로 끝남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 거야?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P씨 설레는 마음도 잠시……, 여행가기전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등을 조회하는데 서서히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검역 및 출입국 심사, 휴대품통관 등 궁금한 사항을 검색하기 위해 각 기관마다 운영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일일이 검색해야하고, 검색하다가 어려우면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하고 ……

비단 이러한 경우가 P씨뿐이겠는가?

해외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독립된 매체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해당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해당 정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자가 원하는 정보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투어패스가 탄생했다.

해외여행자인 정보 수요자 입장에서는 ①해외 여행시 필요한 정보 제공

창구의 통합 ②쉽고 편리한 맞춤형 종합 정보 수집·확인 ③스마트 폰을 통한 편리한 접근 등을 원한다.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기관별로 제공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외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민·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어디 외교부, 법무부, 검역기관, 인천공항공사, 항공사 등 10개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시스템 개발 당시 부처 이기주의와 일부 기관의 부실한 웹 개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강해지자, 부처들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기 꺼려했다.

실제로 모 기관에서는 모바일 웹을 왜 만드느냐, 우리 부처가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불만만 많았다.

담당자와의 통화는 왜 이리 어려운지..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그런 부서 잘 모른다면서 다른 부서를 알려주고, 그 부서에서도 왜 여기로 전화했느냐고 통명스럽게 말하곤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다. 화가 나면서도 씩씩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허무하게 주



〈민·관 합동실무협의회〉

저였을 수는 없지 않은가. 각오를 다 잡고 끈질기게 각 기관에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알아냈다. 그리고 1:1 맨투맨방식으로 여행자 맞춤형 통합 안내시스템은 각 기관의 입장을 뛰어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 이루어져야 구축 가능하며, 국민(해외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모바일 웹 개발이라고 계속 설득했다. 지성이면 감천. 조금씩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외교부, 검역기관, 항공사 등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개최하였다. 기관별로 제공하는 해외여행 정보를 국민의 입맛에 맞게 구성할 방법, 모바일 웹이 없는 기관의 정보는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 시스템 명칭공모는……

투어패스를 제작하는 동안 참여기관 방문·메일·유선 통화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투어패스 개통식〉

우선, 국민에게 제공할 각 기관의 정보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필요 정보만을 취합·분류하여 시스템에 넣기로 했다. 명칭공모는 참여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관심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대상 명칭 공모전을 열었다. 그 공모전을 통해 바로「투어패스(Tour-PASS)―해외여행 정보 신속제공 서비스」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4년 6월 12일, 드디어 투어패스가 세상에 나왔다.

외교부 등 참여기관 기관장 및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의 치하와 투어패스 시연회 등 “투어패스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

[경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 내 주요기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해외여행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여행 정보 제공 웹페이지 '투어패스'(Tour-PASS)는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통관, 외국 여행자통관 제도, 항공기 입출항 정보, 항공사 각종 정보, 외교부 해외안전 정보, 법무부 출입국심사, 공항 편의시설과 교통정보 검색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론 보도 내용

QR코드 여권 부착행사

는데 그 동안의 힘든 일은 저 멀리 떠나가고 가슴 저 밑에서부터 뭔가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다. 이때의 기분은 정말 짱!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든 시스템이라도 이용자가 없다면 죽은 시스템이다.

멋지고 참 좋은 시스템 "투어패스"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전략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방송·신문 등 주요언론 및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카파와 QR코드 여권 부착행사 등 기획홍보로 국민관심을 이끌어냈다.

참여기관의 모바일 웹에 투어패스 바로가기 배너 등재 및 공식 SNS(트위터·블로그 등) 홍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에 대형 현수막 및 전광판·모니터에 송출 등 투어패스를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

6.12부터 현재(8.30)까지 40여만명 정보 검색(일 평균 6천여명)

투어패스 개발 및 홍보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느 기관 하나만의 노력

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수 없었다.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이 토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앞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국민 디자인단 운영,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확대 정비 등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모든 해외여행자들에게 “투어패스”는 해외여행의 동반자·친구 같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투어패스가 보다 많은 국민이 찾는 시스템이 되길 기대해 본다.



무서류 기반의 텍스리펀드 업무개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텍스리펀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의 공항만 세관(제주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김해공항)에서는 외국인관광객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본국으로 출국할 때 내국세부분만큼 환급을 해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세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환급금액이 적혀 있는 전표를 발급해주고 이를 공항만에 도착해서 물건과 함께 세관에 제시하게 되면 세관검사이후에 환급창구에서 세액만큼 돌려준다.

초창기 이 제도가 들어올 때는 환급업체도 1~2개밖에 없었고 환급관련 판매업체도 당연히 적고 외국인관광객들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큰 장애 없이 업무가 이행되었다.

그러나 한류열풍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났고(특히 중국인관광객) 환급업체도 6개나 증가했다. 메리트가 늘어나면서 공항만에 도착한 관광객들의 텍스리펀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업무프로세스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민

원 이 밀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관창구, 환급창구 등에서 일일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출국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항에서 돈 몇 푼을 받기 위해 일일이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 당연히 관련민원제기가 발생하고 세관과 공항에 대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편리하고 빠른 무인환급기

이에 인천공항은 타국세관(싱가폴세관)을 벤치마킹하여 무인환급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무인환급기기 설치를 하려면 이전의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전산화가 기본이라 서둘러 전산화장비를 구축하였다.

공항공사 공개입찰형태로 무인환급기기 개발과 장비를 1개 업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설치했다. 또 세관에서는 전산망을 깔기 위해 기존의 관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내국세환급프로세스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Data가 전송되어야 하는데 관세청전산망을 그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문제로 각 사업자들과 타부처, 세관 정보관리부서가 논의한 끝에 서버를 신규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는 전산개발이 마무리 단계다. 민원인이 공항만에 도착해서 세관에 물건과 함께 전표를 제시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직원이 확인을 해주고, 전산Data에 여행객의 정보가 확인되어 고액환급자나 우범환급자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다. 이제 선의의 여행자는 신속하게 세관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또 2013년에 개정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1만원미만은 세관검사 생략으로 무인 환급기기를 통해 직접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점점 반출확인의 속도가 개선되고 있다.

매년 2배 이상 텍스리펀드 수요는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민원도 감축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텍스리펀드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개선되었다.

수천 개의 가맹점으로 인하여 아직 모든 환급사업자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모두 전산화가 될 것이다.

전국의 타 세관에도 무인 환급기기를 설치하고 환급업체도 더욱 증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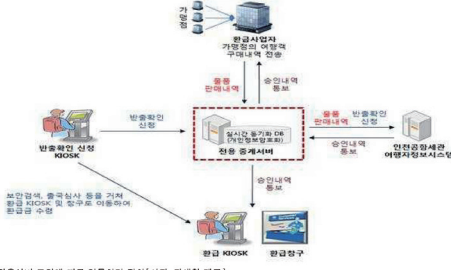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외의 협력으로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면, 외국인관광객 관광수입이 증가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이미지제고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 40초면 '뚝딱'...전용서버 구축

5분 걸리던 환급처리시간 40초...내국세 환급 전용서버 운영

이슈가 기자 (juda@ajunews.com) | 등록 : 2014-09-25 08:51 | 수정 : 2014-09-25 08:51



전용서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시간=관세청 제공)

이슈경제 이슈가 기자 →무인기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세 환급(Tax Refund) 간수도 크게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을 위한 전용서버를 구축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에 나선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출국 때 내국세 환급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사후연세시달(시흥 박희환 통관) 또는 상가 일부 매장(하드웨어 등)에서 6000원 이하의 용품을 구매하고 세관 인출을 한 후 공항무시달에서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흥시와 부산시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곳이다.

최근 내국세 환급 신청을 받았던 2013년 184여명에서 신청 증가 추세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585여명만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9여명이 신청한 실정이다.

하지만 환급대상 간수 금액에도 세관의 한정보로 인해 반출품을 확인에 한 가지 따르면 현재 신청(문화체육관광부)을 기준으로(무인환급기) 2시간을 넘겨야 했다.

해당 무인환급기는 환급액 1만 원 이하의 구매증빙에 대해 세관 출국당사자를 병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나 관세청 콘서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기본 관세청 콘서플리케이션은 자료 처리에 5분 정도가 소요되고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버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2억7000만 원 내국세 환급지원(간접)에 지원할 수 있는 관세청 별도의 전용 서버를 만들고 7일 운영을 시작했다.

시험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시간도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축감되어 자료의 유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편이 줄어든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니(문화체육관광)'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세 환급'이 아닌 '내국세 환급'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환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국세 환급 처리를 더욱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

BRITISH AMERICAN TOBACCO



PHILIP MORRIS KOREA INC.

담배 생산 정보



담배 저분 정보



대사자료 생성 및 상시 감시



담배 불법유통은
끝남

담뱃값이 오르다던데 불법담배가 더욱 활개를 치겠군?!
아니,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담배 한 개비까지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그럴 일은 없지!!!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만 있으면 이제 담배 불법유통은 끝!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평균 담배 한 갑 가격인
2500원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등 총1560원, 판매가 대비 무려
약63%가 세금이다. 한마디로 담
배는 세금 덩어리인 것이다.

이런 담배의 높은 세금 부담율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밀수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왔다. 세관원들에게 밀
수단골 품목인 담배는 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사상최대의 국산 면세담배 2,933만 갑(시가 600억대) 밀
수사건이 관세청 자체 정보 분석에 의해 적발되었다.
옛날 같았으면 “사상최대 국산 면세담배 밀수 적발”이라며 언론에 자랑
한번하고 앞으로 수출용 담배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산 면세담배를 조직적으로 유출하였다. 게다가 국내 굴지의 담배 제조사의 지점장까지 연루되는 등 뭔가 큰 구멍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우선 과거 담배밀수 사건의 사례를 보니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담배의 94%가 국산 면세담배라는 사실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결국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을 찾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담배는 누가 관리하나?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을 통해 담배 사업(판매)을 관리하고, 특히 지방세법에 국산 면세담배 제조자는 면세담배의 용도별 생산량을 10일 그리고 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산 면세담배 2,933만 갑! 이 많은 면세담배는 어떻게 지자체에 신고(반출)되어 세관을 통해 수출신고 되었는지 유통경로를 추적해 본다면 뭔가 허점을 보완할 대책이 떠오를 것 같았다.

우선 안전행정부를 찾아 사상 최대의 국산 면세담배 밀수 사건을 설명하고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국산 면세담배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로 공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국산 면세담배 제조사 3사의 제조공장 5곳을 방문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된 2013년 1년간의 자료를 확보하여 세관에서 보유중인 통관내역과 대사(Cross Checking)해 보는 방식으로 '14.1.10~3.21'까지 면세담배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문제원인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담배 관련 부처들인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지자체(지방세법) 그리고 관세청(관세법)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 철저히 준수할 뿐 각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허점을 피의자들이 노렸던 것이다.

피의자들은 우선 제조사 지점장을 매수하여 외항선원용으로 다량의 국산 면세담배를 받았다. 그리고 유령의 식품업자들을 내세워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는 조직적으로 시중유출을 해왔던 것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피의자에게 외항선원용으로 다량의 면세담배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세관에게 알렸거나, 반대로 세관이 보유한 국산 면세담배 수출자료를 관할 지자체와 공유했다라면 위와 같은 사상 최대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담배유통 통합관리협업체 구성



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관세청은 5.29 가칭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6회에 걸친 개선(안) 검토 회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개정하여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되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안전행정부는 서울시, 관세청은 대전시, 인천세관은 인천시에 소재하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면회의는 어려웠지만 최근 도입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나라e음’을 적극 활용해서 의사

소통을 했다.

우리나라는 요즘 담뱃값 인상 논란을 넘어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럴수록 경제적 이득을 노린 담배 밀수 등 불법 유통은 더욱 기승을 불릴 것이다.

내년에 도입될 '담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내 제조되는 면세담배뿐만 아니라 수입담배까지 포함하여 제조자 및 수입자가 생산 및 수입한 담배를 공급(판매)할 때 면세담배 용도, 판매일, 판매량, 양수자 등을 신고하도록 전산화하고, 세관에서 보유한 수출, 외항선 공급, 면세점 등에 공급(처분)된 내역을 연계하여 시스템적으로 대사(Cross Checking)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담배 관련 정부 기관에 시스템을 개방·공유하여 실시간 상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또 면세담배의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담배 지역별 소비량, 흡연율 등 실시간 흡연(담배)관련 통계 활용이 가능해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금연정책 수립이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일보

2014년 09월 19일 금요일 016면 경제

관세청 “면세담배 불법유통 꼼짝마!”

생산·판매 등 실시간 감시 면세한도 위반 자진신고면 세액공제 혜택 등 주기로

■ 내년 1월 예정된 담뱃값 인상으로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담배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해외여행객들이 600달러로 상향된 면세한도 범위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어겼다가 들쭉날쭉 가산세율을 2배로 올려 제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2

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김낙희 관세청장과 목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관세행정상 비정상적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500원 담배 기준으로 갑담 세금 비중이 62% (1550원)인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유통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내년 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면세담배 불법유통 적발 규모는 2011년에 41억 원, 지난해에는 430억 원, 올해 1~7월에는 1255억 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종욱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

관은 '이 시스템은 KT&G 등 모든 담배 제조사의 생산정보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청의 판매 정보를 통합 관리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으로, 국산 면세담배 및 과세담배, 수입담배가 모두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지난 5월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것에 맞춰 면세한도 초과분을 자진신고하는 여행객에게 내야 할 세액의 30% (15만 원 한도)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가산세율을 30%에서 60%로 올려 적용키로 하고 관세법 개정안에 담야 국회에 제출했다. 이민준 기자 horizon@





시중 유통되는 수입 공산품이 안전한가에 대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입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

| 숫자로 보는 제품 사고 | |
|--------------|---|
| 110% |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2010년 대한민국의 대외의존도로, 미국 53%, 일본 30%, 독일 34%로 G20중 1위이다 |
| 24,312 | 2013년 우리나라 어린이제품 위해사고 신고 건 |
| 7,420 | 2013년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 화재 발생 건 |
| 343 | 2013년 우리나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47명, 부상 296명) |

‘2010년 무역의존도 110%’

14년 무역규모 세계8위 무역대국(大國) 대한민국 국민이 소비하는 소비재의 약 80%이상은 부품형태든 완제품 형태이든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져 들어온다. 최근 취임한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 못지않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안전이 국민 행복의 필수요건이며,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의 사회자본”이라고 말했듯이, 안전하게 사는 문제가 국민 NO.1 관심사가 되었

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막는 것은 이제 세수 확보 보다 더욱 중요한 미션이다.

사각지대를 악용한 수법은 점차 늘어만 가는데……

그간 관세청은 관세국경선에서 불법 수입제품을 막기 위하여 세관장확인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일부 불법·불량품 취급업자들은 기관에 최초 인증시에는 고품질의 물품으로 인증 받는다. 그리고 다음 수입분 부터는 저가의 부분품을 교체 사용하여 수입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한다. 규제완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는 세관의 수입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또한, 유통단계 제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내분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 중금속을 함유한 유아용품, 어린이 용품, 완구 및 전기용품 등은 리콜(Recall)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단계에서만 하는 단속 특성상, 모두 수거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불법수입물품의 반입을 완전 차단

이에, 통관단계 불법수입물품을 막고 있는 관세청과 유통단계에서 제품안전과 평가·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수입제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손을 모았다.('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협업과제 확정)

협업 과제는 먼저, 불법수입제품 취급업자의 정보 공유이다. 국표원은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품 취급업체 명단을 관세청 통관정보센터에 알려주면 관세청은 불법 수입물품을 족집게처럼 선별하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을 이용하여 위험 업체의 화물만을 타겟팅(Targeting), 검사선별한다. 그렇게 최소한의 검사로 선량한 수입업체의 부담은 줄이고 동시에 불법제품의 적발률은 높다. 검사 지정된 건은 세관에서 직원이 검사하고 인증사항과 실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견본을 채취하여 국표원에 평가를 의뢰한다.

이어서, 국표원은 신속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 필수 시험분야를 선정하여 5일 이내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 뒤 세관에 통보하면 세관에서는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의뢰를 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정 기준에 미달한 불법·불량은 반송·폐기 조치 할 예정이다.

하나의 작은 시도가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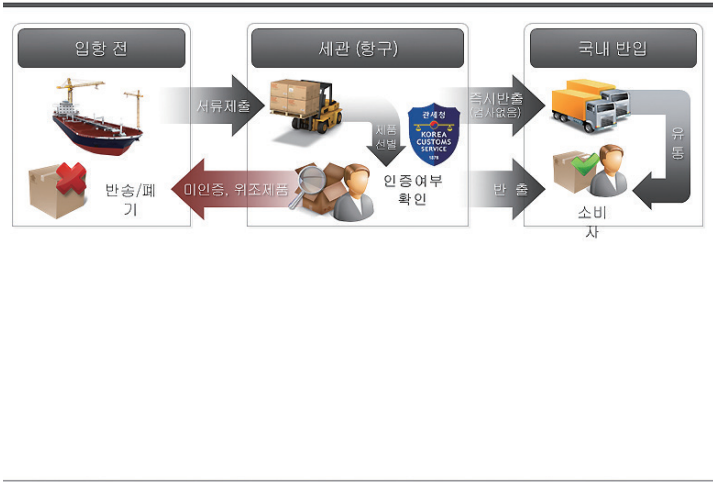
이 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이제도는 미국, 유럽 연합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시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 제품안전관리 방식이다. 미국 관세청(CBP)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9년부터 협업을 시작하여 2013년 상반기에만 678건을 적발하여 약 6백만개의 제품을 반송·폐기 조치하였다.

관세청은 국표원과 3개월간 인천세관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상 일부 어린이용품, 완구 59개 품목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298개 품목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15년 전 국세관에서 확대 시행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짝퉁·불량 중국산 철강재로 건물안전이 우려되고, 일급 발암 물질인 폴아미데하이드가 일부 텐트 그늘막에서 검출되는 등 안전 기준이 도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제품을 완전 차단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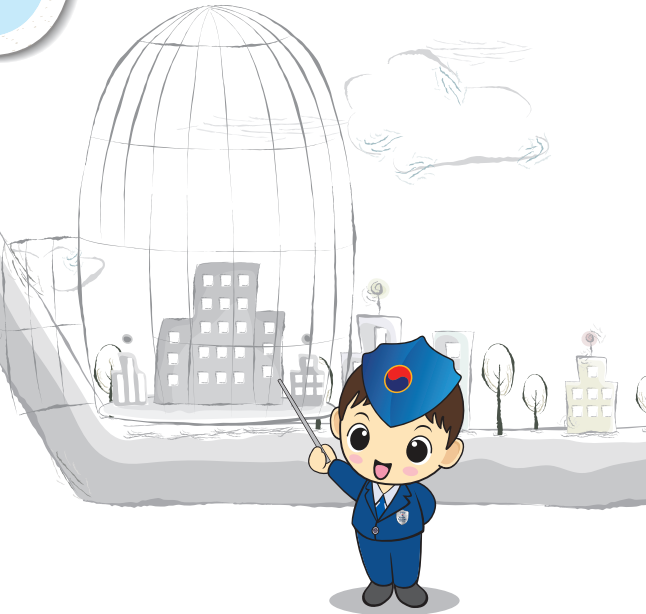
현행(AS-IS)



향후(T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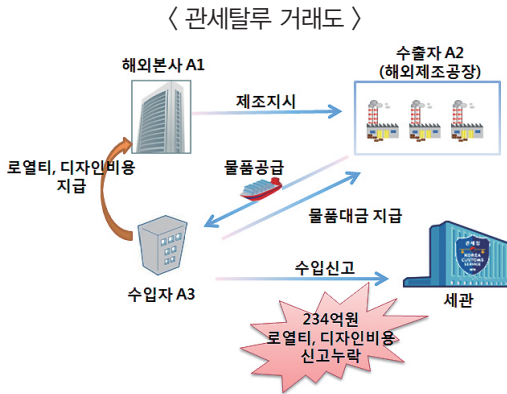
탈세 및 체납
꼭꼭
잡어내겠습니다.



과세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공정한 과세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탈세 및 체납 물리치자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다국적기업인 A사는 2010년부터 기업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재무제표 등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내부자료를 비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무

정보를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한회사에 대한 사전 위험분석이 어렵다. 하지만,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A사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손에 넣은 후, 수출입실적·외환거래 내역 등 관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합하여 A사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A사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로열티와 디자인비용 236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고, 관세 등 탈루세액 66억원을 추징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정보들을 합하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도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체납 관리 등 과세목적의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어려운 준비과정이었지만 정부 3.0을 통해 이뤄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유, 협력이라는 정보 3.0에 기반하여 국세청 등 타 정부기관과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 행위가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기관 간 과세자료 공유는 관세청이 미리 위험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관세청이 다양한 과세자료를 비교하여 위험분석을 체계화하면, 효율적이고 엄정한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입수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을 너무나 험난했다. 효율적인 관세조사를 위해 확보가 필요한 과세자료들은 국세청,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의 각 기관 각 과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소관부처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산 너머 산이었다. 제출대상 자료를 정하고 소관부처까지는 결정이 났지

〈유형별 추가 공유 과세자료〉

| 근거조항 | 과세자료 유형 | 자료수 |
|------------------|--------------------------|-----|
| §제264조의3 제1항 제1호 | • 할당·양허관세 자료 | 2종 |
| §제264조의3 제1항 제2호 | • 관세 감면 자료 | 12종 |
| §제264조의3 제1항 제4호 | • 체납 관련 자료 | 13종 |
| §제264조의3 제1항 제5호 | • 관세의 부과, 징수, 통관에 필요한 자료 | 17종 |
| §제264조의3 제1항 제6호 | • 카드사용 내역 | 1종 |
| 합 계 | | 45종 |

만, 낯선 타기관 업무의 파악하여 담당부서를 찾고 담당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처에서는 전화를 7번 돌리고 나서 결국엔 처음에 전화했던 부서로 다시 되돌아 간 경우가 있었다. 또 어떤 부처에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세부 내역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의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였다.

또한, 국제경기를 주관했던 조직위원회는 해당 국제경기가 종료되면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후 인수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담당자와 연결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공유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서식을 정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드디어 법령 개정안이 준비되었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제출 시기를 정하는 관세법시행령이 2014년 3월 5일에 공포되었으며, 3월 14일에는 제출 자료의 서식을 명확히 하는 관

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7개 기관으로부터 45종의 과세자료를 받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실한 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우범기업만 콕콕 집어내겠습니다.

관세청은 이렇게 제공받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심층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골라서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수감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과는 지난 해 9월 각자 보유중인 과세자료의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6종(관세청 → 국세청: 13종, 국세청 → 관세청: 23종)으로 확대하였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이전가격 왜곡 다국적기업 등 80개 고위험 업체를 골라서 관세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과 off-line 방식으로 현재 年 6회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시작하였다. 또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공평하고 엄정한 관세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끝까지 노력하여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상적 탈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정직하게 진행하고, 한편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관세조사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알고계신가요?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과 기업의 신뢰성을 높여 드립니다.

| | | | | |
|--|--|--|---|--|
| <p>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란?</p> <p>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p> | <p>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의 혜택</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3 1045 485 1220"> <p>중소기업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원산지확인서 신뢰도가 높아짐 입증자료 세관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 원산지 검증 </td> <td data-bbox="491 1045 638 1220"> <p>수출자 등 (물품을 공급받는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특혜수출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 받아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에 활용 </td> </tr> </table> | <p>중소기업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원산지확인서 신뢰도가 높아짐 입증자료 세관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 원산지 검증 | <p>수출자 등 (물품을 공급받는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특혜수출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 받아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에 활용 | <p>신청 및 처리절차</p> <p>중소기업 → 세관장에게 원산지확인서와 입증자료를 제출</p> <p>세관장 → 원산지확인서를 심사·판정후 심사결과서 통지</p> <p>중소기업 → 확인받은 원산지확인서를 물품공급시 제공</p> |
| <p>중소기업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원산지확인서 신뢰도가 높아짐 입증자료 세관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 원산지 검증 | <p>수출자 등 (물품을 공급받는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특혜수출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 받아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에 활용 | | | |

*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공개하여 기업홍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한국산?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표시된 대로 믿고 드셔도 됩니다.
영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츰츰해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이제 원산지 세탁은 위험한 도박

#불만사례1 ; 내가 먹은 장어의 원산지는?

서울 창동에 사는 주부 김꼼꼼씨는 여름 무더운 복날에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몸보신을 위해 근처 유명한 ○○장어 음식점을 찾아갔다. 그 음식점은 국내산 ○○장어 전문점으로 복날에는 기본 30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다. 최근 장어가 비싸져서 1kg에 10만원이나 하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거금을 써서 맛있게 장어를 먹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김꼼꼼씨는 모 방송국의 소비자들 불만을 취재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 중국산 장어를 납품받은 국내 유명음식점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는 방송을 보았다.

김꼼꼼씨는 오늘 저녁 가족들과 맛있게 먹은 장어도 혹시 중국산이 아닐까 불안해지는데....

불만사례2 ; 단속기관마다 처벌이 다른 이유는?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나꼼수씨는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세관 원산지 단속팀에 걸렸다. 이전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걸려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세관 단속팀은 나꼼수씨에게 허위표시로 처음 적발되었다고 소고기 판매금액 중 일정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나꼼수씨는 왜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단속기관이 농관원이나 세관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른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관세청, 수입 수산물 특별단속 언론보도〉

문화일보

2014년 04월 07일 월요일 017면 경제

日産 가리비·참돔-中産 냉동새우 원산지표시 위반... 국산 둔갑 기승

관세청, 33개업체 650억 적발

■ 일본산과 중국산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오인케 하거나 아예 둔갑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문제로 불거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21일

까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일체단속을 벌인 결과, 33개 업체, 650억 원(8000여t)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률과 견줘 1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변동육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은 "지자체보다 검사대상 업체를 3배 가량 확대하고 수입자, 유통업자, 음식점까지의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강화한 결과"

라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일본산 활빙어등을 구매한 후 보관용 수조에 원산지표시를 없앤 후 보관하거나,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중국, 일본 원산지를 동시에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참돔을 보관·판매하고 있는 수족관에 원산지를 알리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거나 중국산 냉동새우 포장 박스에 '대한민국 대표 새우'라는 문구를 새겨 넣기도 했다.

이민홍 기자 horizon@

원산지표시가 왜 중요한가?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할 때, 그 생산지를 알면 상품 구매여부 결정 등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가의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꾸며져 비싼 값으로 판매되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이 약해지고, 그 결과 기업이 망해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더 중요한 건 유해성분이 들어간 식품이나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 함량 미달의 철근 등 공산품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거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동안 관세청 등 단속기관(농관원, 수품원, 지자체)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진행했지만, 단속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서(관세청은 대외무역법, 농관원·수품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 수입업자·유통업자 등은 다양한 단속기관의 반복되는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국회와 언론도 단속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국내 생산자 단체 등은 업계 피해 호소 및 단속강화를 원했다. 또 도소매 판매업자는 단속과 처벌위주의 원산지 관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당사자인 단속기관과 업계, 국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지난 수년간 원산지 둔감으로 인한 국민안전과 중소기업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제는 1 ; 손에 손 잡고

이에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

산부 등 정책부처와 회의 끝에 2014년 4월 18일 농관원, 수품원,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신설했다.

범정부 협의회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도소매 판매업자에 대한 중복단속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통관자료 제공확대, 단속기관간 원산지표시위반 처분 내역 등 단속정보 공유를 통해 시중 유통단계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기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직원대상 교육과정을 만들고 통합 단속기법 매뉴얼을 제작·배포도 하게 된다.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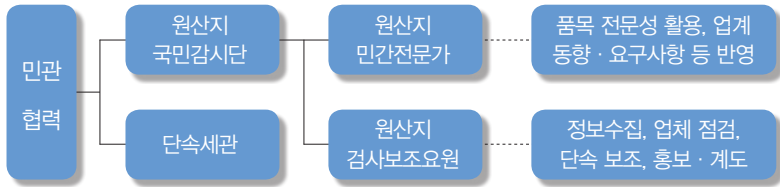


이제는 2 ; 관세청,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다.

관세청은 민간단체의 관세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하여 ‘원산지 국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35개 민간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138명의 민간전문

가와 5개 본부세관에 서 원산지표시 관련 정보수집과 홍보를 보조하는 20명의 검사보조요원으로 구성된다.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세관 단속직원과 함께하는 워크숍과 연수원 교육의 단속기법, 사례학습을 통하여 단속능력을 키운다. 특히, 검사보조요원은 매년 1월 관세청 홈페이지와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채용공고를 함으로써 원산지표시 단속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원산지 국민감시단 운영체계〉



이제는 3 ; 관세청, 3.0 버전으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관세청은 또한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정착하기 위해 2년마다 일반국민과 중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 2013년에 농관원, 수품원의 자료협조와 서울시, KORAIL의 장소협조, 민간협회의 도움으로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개 도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수입산과 국내산의 원산지 구분하기’, ‘내 물품의 원산지 찾기’ 등시민참여형 이벤트를 통하여 2만여명의 국민들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전시회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 조사대상자 중 76%가 만족

한다고 말했다. 전시회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높였다.

(2013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순회전시회 언론보도)



단속성과 ; 503개 업체 · 7,797억 적발(*14.8월 기준)

관세청은 2014년 중점 특별단속(실·대보름, 수산물,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철강재, 여름 휴가철)을 통하여 503개 업체 · 7,797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범정부 단속기관간, 민관 간 소통과 협력의 결과이다.

특히, 중국산 민물장어의 국내산 원산지 바꾸기와 관련해서는 수품원, 민간협회 등이 수입물품의 통관단계부터 유통단계, 최종 판매단계까지 힘을 합해 3개 업체, 6억원 상당을 적발함으로써 범정부 기능적 합동단속의 성공모델을 만들었다.

**1,100억원
세금 절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조세정의를 이루다!**

취약계층 아동 5만명에게
1년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30만명의
3개월치 점심해결

지체장애인 55만명에게
휠체어 지원

독거노인 22만명이 따뜻하게
지낼수있는 난방비 지원

보건복지부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187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복지와의 정보공유로 치료재료
수입가격 조작 485억원 적발

국세청과의 탈세정보 공유로
615억의 세금 추징

뉴스에서 접하는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이야기에
국민 여러분, 많이 속상하셨죠?

관세청과 국세청이 손잡고 역외탈세를 차단합니다

불법외환거래와 역외탈세는 동전의 양면

부처 간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오랫동안 묵힌 문제다. 특히 민감한 수사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국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 돈에 대해 모두 관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루어지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즉 역외탈세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불법외환거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혐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대 기관에서의 혐의 추적도 쉬워진다.

최근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

사들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져나갔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역외탈세행위는 정직하게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서민들은 이들의 세금부담까지 떠안게 되고, 대체 이 나라에 조세정의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역외탈세 단속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의 정보공유 노력은 참으로 반갑다. 보수적이고 딱딱할 것만 같던 관세청과 국세청이 ‘역외탈세 단속’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맞잡은 것은 대단한 발전이다. 벌써 작은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3.0 아래 두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에 들어간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8건의 혐의거래정보가 교환되었고 그에 따른 역외탈세 추징액이 973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매년 1,061억원의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 이는 추운 겨울 밥을 굶어야 하는 결식아동 50만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따뜻한 점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각종 신고 자료의 공유를 통해 매년 1,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인공관절, 심장 수술 재료와 같은 의료재료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11개 업체 485억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2,061억원의 세수 증대와 485억원의 국고 손실방지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의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노력은 인력이나 예산의 투입 없이 적극적

인 정보공유만으로도 연간 2,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냈다. 물론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가 한순간에 허물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3.0에서 추진하는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공공서비스
수혜 확대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내 세금도 아깝고, 국가재정도 위태롭게 하는데!

공공재원 부당수급 근절을 통한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수혜 확대

사례1 ; 의료용품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 및 치료를 돕는 복지용구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정부의 복지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가운데 A사 등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인 37억원 보다 2.3배를 부풀려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통상적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하려하는데, A사 등은 오히려 복지용구 등이 세금감면품목이 많기 때문에 수입가격을 고가로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약 6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국고보조금을 과다하

게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관세청은 위와 같이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국가공공재원을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손을 잡고 지난해 9월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공재원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조세회피 행위가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는 현실 속에서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로의 핵심 정보를 내어 놓고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의 핵심자료인 수출입·외환자료와 복지부의 핵심자료인 보험급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재정과 국민경제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징세기관인 관세청과 질병, 빈곤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부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11개의 업체와 부당이득금 485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계속해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만명에게 수동휠체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사례2 ; 수출보험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

이 뿐만이 아니다. 관세청은 성실한 수출기업의 안정된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른바 악덕업체들이 수출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상품성 없는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떼어 먹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부당하게 보험금 수령하는 사례가 줄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수출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부처 간 협력은 인력이나 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적극적인 정보공유만으로도 노인·장애인의 복지서비스가 증대된다. 또 성실한 수출기업의 안정된 기업 활동이 강화되어 국민이 행복해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 행위를 뿌리 뽑아 공평하고 엄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항공사한테 받는 정보는 결국 동일한데 왜 돈을 각각 내야하지?
한 번만 지불하고 우리(CIQ)끼리 공유하면 안 되나?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로 안전하고 편해지는 공항 출입국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번거로운 출입국 절차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6백여 편 가량의 비행기가 세계 각국으로 오르내리며,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출입국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허브공항이다.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세계로 열린 관문이다.

공항을 통해 출입국을 한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스 등 신종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을 한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행자가 입국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심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과세를 위해 통관을 하고, 휴대물품을 검색하여 마약 등 국민생활 저해물품을 차단한다.

이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마친 여행자만 아름다운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다소 번거로운 출입국절차는 국민생활 보호와 관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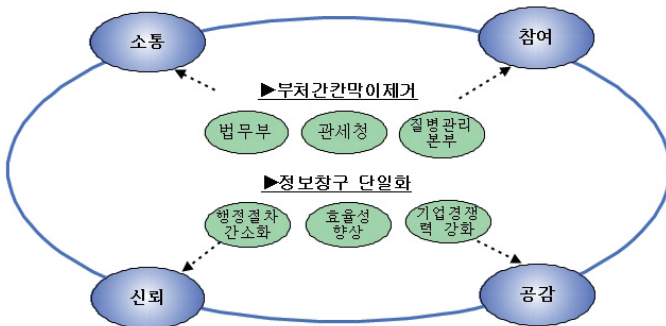
경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행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빠르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느냐는 공항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CIQ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CIQ라는 약자로 불리우는 통관(Customs : 관세청), 심사(Immigration : 법무부), 검역(Quarantine : 질병관리본부)의 출입국 절차는 그간 서로의 분야에서 민원인 서비스개선을 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관세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가치를 적극 도입하여, 관련기관과의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 여행자 출입국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전략〉



그 동안 CIQ기관은 업무에 필요로 하는 여행자 정보를 항공사에서 각각 입수하고, 소요되는 비용 역시 각각 냈다.

관세청은 우선 정보입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보입수에 따르는 비용의 중복을 없앴다. 또 정보품질을 향상시켜 CIQ기관에 제공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CIQ기관과 정보단일화 창구 운영의 주체와 공유정보의 범위를 협의 하였다. 하지만 만연한 기관 이기주의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꺼려했고, 내부적으로도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반대했다. 기존의 구조 속에서 수익을 보고 있던 민간사업자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정부3.0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 각 이해집단을 설득하고 양보하는 소통의 정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여「CIQ정부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을 통한 여행자출입국 관리」에 성공했다.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CIQ기관으로 단일화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관세청은 CIQ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12년 우범여행자 등을 약 3만 5천 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체 마약검거 실적 중 51%를 차지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스템을 통해 입수되는 정보를 약 6만4천 건의 출입국심사 실적자료로 활용했다. 질병관리본부도 감염병 추적조사 등에 CIQ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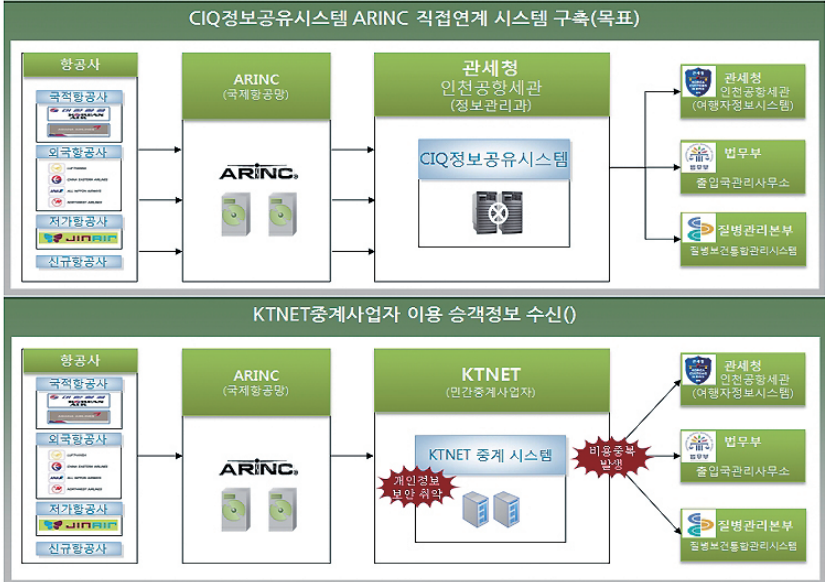
또한, CIQ기관마다 정보입수에 소요되었던 비용이 줄어서 향후 10년간 110억원 정부예산을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필요정보 입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이 불필요해 각각 20억원이 드는 별도 시스템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향상된 업무효율은 여행자 입국시 CIQ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입국 시 소요시간이 국제기준보다 3배 빠른 평균 12분으로 줄었다. 덕분에 2013년 6월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더욱 더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철저한 국경관리와 신속한 출입국서비스를 보장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아 갈 계획이다.



〈승객정보 전송체계〉





우리나라 산업보호를 위해 덤핑방지 관세를 매긴다는데
이마저도 속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해외 불법·우회덤핑 걱정 없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켜갑니다

덤핑? 덤핑방기관세?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덤핑”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덤핑”이란 무엇일까? 덤핑(dumping)은 “부당염매(不當廉賣)”를 뜻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싼값에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덤핑은 불공정무역행위라서 덤핑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덤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수출자의 자국내 또는 제3국으로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정상가격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덤핑가격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덤핑방기관세다. 덤핑방기관세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다.

덤핑방지관세를 피해가려는 나쁜 시도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에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된다. 이 관세는 덤핑수입물품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은 해외공급자별로 서로 다른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물품인 경우 5%, B업체의 물품인 경우 20%를 적용한다. 그러니 수입자와 수입자에게 더 많이 판매하고 싶은 해외수출자 입장에서는 낮은 덤핑세율을 적용받는 업체의 물품으로 눈속임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최근 생산자증명서 위조를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99개 업체에 대해 약 200억을 추징하였다. 이번 대규모 적발은 덤핑을 하지 않는 해외 업체의 적극적인 제보와 정보제공이 큰 역할을 했다. 덤핑이라는 것이 수입국의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출국의 제조업체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덤핑방지관세, 과연 제대로 부과되고 있을까?

관세청은 대규모 덤핑방지관세 탈루적발을 계기로 덤핑방지관세가 과연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 것을 알았다. 현행 덤핑방지관세제도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덤핑방

지관세율의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수입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징수는 관세청이 하는 3원구조로 되어있다. 관세청은 각 부처가 각각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상호교류가 부족했던 점이 관리 소홀을 일으켰다고 보고, 무역위원회와 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덤핑방지관세의 촘촘한 그물을 엮어나가다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14.8.14.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세청-무역위원회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간 정보공유,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에 대한 관세청의 참여, 탈세업체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다. 덤핑방지관세를 피해가려는 시도는 앞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낮은 세율의 업체로 서류를 위조하는 것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양기관간 정보공유는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 무역위원회의 수출가격 조사 자료를 관세청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해서 관세탈루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업체는 탈루한 관세를 추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방지관세 기간 연장 심사 시에 덤핑방지관세율의 산정에 패널티를 줄 수 있게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탈루 업체에 대한 모든 제재를 논의하기로 했다.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혼란은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권익도 보호

덤핑방지관세는 비단 탈루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일선세관의 통관현장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세관과 납세자간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국내산업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강조하다 국내산업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물품이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고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 역시 관련 부처 간 상호교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세청, 무역위원회, 기재부의 실무자간 현안협의그룹을 구성했다. 바로 「덤핑방지관세 부과협의회」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협의회」에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을 규정할 때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내산업과 관련없는 물품들에 덤핑방지관세가 잘못 부과되는 일을 막는다. 또 쟁송 등 납세자마찰비용도 줄이자는 데 관련 부처들이 발 벗고 나선다. 협의회에서 부과대상물품의 정의를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덤핑물품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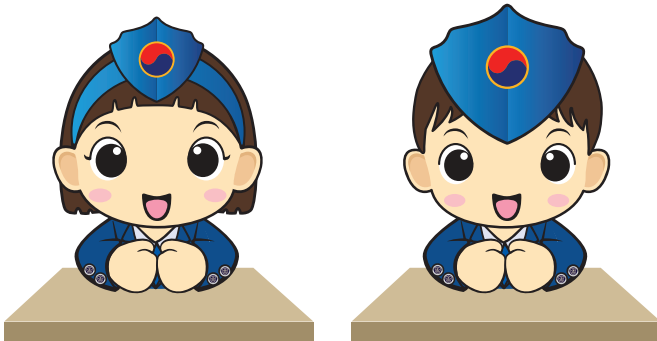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은 12개 국가 총 14개 품목으로 연간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약 800억원이다. 현재 덤핑조사가 시작해 향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물품도 6개 품목이나 된다. 그만큼 덤핑에 의한 국내산업피해가 걱정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비롯한 정부기관이 덤핑방지관세를 피해가려는 나쁜 시도들은 힘을 합쳐서 막아주고 국내 산업을 지켜주어야 한다. 다만, 덤핑방지관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라서,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내산
업과 관련 없는 물품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세계HS정보시스템 HS국제분쟁신고센터



FTA 협정세율 적용의 기준, 국제관세분쟁 원인 1위,
해외통관애로 영역 1위가 품목분류(HS) 관련 사항이라는 거 아니요?

수출기업의 구원투수, “세계HS정보시스템”과 “HS국제분쟁신고센터”

품목분류가 왜 중요한가?

언론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시장 정보부족(53.3%)이고, 수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는 FTA활용(45.2%)에서 원산지증명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품목분류(34%)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겪고 있었다.

품목분류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품목부호 6단위 숫자로 구성된 체계이다. 많은 기업들이 품목분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6단위 5,052개의 품명과 숫자 체계를 기초로 세계 각국은 8단위나 10단위로 확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상품 분류 체계가 1만개 이상이 되어 방대하고, 세계 관세 기구 공식해설서(총5권)도 2,538페이지에 달하한다. 또 전자, 화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 필요한 업무이다.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대국가와 품목분류(HS)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수출업자는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HS코드에 따라 FTA 협정 세율 적용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품목분류 행정은 FTA를 집행하는 관세행정의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가 밤새워 모은 HS정보는 국민에게 개방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관련한 국제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국제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정보 구축과 대국민 개방을 위한 액션을 시작했다.

국제분쟁 발생 시 그 금액규모가 큰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구축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어려웠다. 직원들은 밤마다 사무실 책상에서 세계 각국 관세율표와 결정사례 소스를 찾아 정보의 바다를 헤맸고 해외 각국 관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일일이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다른 직원이 한 것을 감수하고 정제하고..... 이런 오랜 공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터넷 베이스의 세계HS정보시스템이 2013년에 태어나 181만건이 넘는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세계51개국 관세율표, 국내외 32개국 품목분류 사례, HS협정, 품목분류 관련 법령 정보, “HS국제분쟁신고센터”, 주요 산업별「HS가이드북」등 세계 최대 품목분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181만건의 DB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공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교역량 80%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이며 월평균 6만명이상 접속하고 있다. 민과 관이 합

게 만든 「HS가이드북」의 원본 파일도 업체와 협회에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재창출하도록 지원하였다.

쌀인 HS정보는 상대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때, 중요한 무기

최근 이러한 정보구축의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이 HS 빅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빅데이터를 비밀병기삼아 HS국제분쟁건들을 해결한 사례가 작년부터 늘어나면서 올해 감사장과 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 터키와의 휴대폰 메인보드, 폴란드와의 TV튜너, 미국과의 TV용 사운드바, 중국과의 스마트폰 게임패드, 태국과의 스크린 골프 시스템 등 HS분쟁 해결로 연간 관세비용 500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었고, 2008년 이후 누적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대중국 스마트폰 게임패드의 HS 국제분쟁 해결사례는 외교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분쟁을 해결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사례이다. 대미국 TV용 사운드바 사례는 업체 담당자가 자력으로 세계HS정보 시스템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를 확보하여 미국 뉴욕세관에 분류 의견을 주장하여 상대국이 수용한 경우로서 정보 구축으로 업체의 품목분류 체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수출 주요 품목별 e-가이드북 제공에 대해 업계의 호평을 받았고, HS국제분쟁 해결 성과와 정부 3.0 정책 추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속속 나오면서 그 수는 총 100여건에 달한다.

정부3.0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출체력 강화

이러한 성과는 정부 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모두 내재화하여 업무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3.0정책 추진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HS분쟁 해결력의 증가는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능한 정부가 국민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더 중요한 바, 세계HS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영업이익과 일자리 창출의 한 사례로서 'CLHS'라는 HS정보제공사이트는 관세청이 결정한 품목분류사례 등을 무료로 다운받아 국민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준다. 셋째, 업무 생산성 향상이다. FTA확대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 급증이 2010년 2,223건에서 2013년 7,006건으로 증가하였고, 직원 1인당 생산성이 2010년 131건에서 2013년 318건으로 향상되었다.

분류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품목분류의 대중화'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정부3.0 정책을 4가지 분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첫째,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 개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엑셀과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국민보급형 품목분류 도감을 만들어 그림으로 보는 품목분류 사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HS업무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넷째, 관세율표와 분류 사례 제공 국가를 더 확대하고 연도별 데이터와 HS가이드북을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분류원의 비전은 바로 ‘품목분류의 대중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체력 강화이고 그로 인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한국이 품목분류에 관한 한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다. 분류원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수출기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HS정보의 견고한 후방지,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진 자료]

수출기업의 구원투수
「세계HS정보시스템」과 「HS국제분쟁신고센터」

우리는 왜 BIG DATA를 구축하여야 하는가?
구축된 DATA는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

① BIG DATA 구축 해외 관세정보를 안방에서!

「세계HS정보시스템」 탄생!

- ▶ 세계 61개국 관세조표 ▶ 국내 및 해외 무역 사례
- ▶ WCO 관세분류 정보 ▶ HS협정, 입항정보
- ▶ 7개 지역관세신고센터 ▶ 무료 상담 7*24 가이도

“세계 각국에 산재된 방대한 관세 정보를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확보된 DATA 활용을 위해 다시 정제작업을 거치고...”

- I 세계 최대 **품목분류 정보시스템** 181만건의 DB를 민간에 **무료 개방**
- II 우리나라 **수출교역량 80%** 해당하는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 확보**
- III 월 평균 **6만명 이상 접속** (19년 7월 이후 총 749,555건 접속)

③ 비밀병기가 되다 해외관세정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고맙습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여러분!

“스마트폰 게임패드’ 중국시장 길 열린다.” (아니투데이, 14.6.12)

“HS국제분쟁 관세청이 해결사” (주간부러, 14.6.12)

“관세청, 폴란드 수출품 분쟁해결... 100억원 절감” (세계비즈니스, 13.4.1)

- I (14.5.10) 對美 HS 분쟁 타결 신규 분류논리 개발·채권, 70억원 환급
- II (14.5.13) 對中 HS 분쟁 타결 동경세관 사례 발굴, 투자비용 1천억 구제
- III (14.5.15) 對美 HS 분쟁 타결 뉴욕세관 사례 발굴, 1억원 추정 취소

(성공요인) 정부 3.0의 4대 가치를 모두 내재화 하다!

기업과 함께 대응되는 개발

소통 개방 세계최고 Big Data 민간에 전면 개방

4대 가치

기업 필요 정보 민·발 공동 생산 공유 협력 외교부 등과 협조 해외 당국 설득

FTA 확대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 급증을 BIG DATA를 활용하여 내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

내부 생산성 향상

| | | | |
|----------------|--------|------------------|------|
| 분류분류 사전심사 민원건수 | 7,008건 | 적용/민원 생산성 (처리건수) | 318건 |
| 19년 | 2,223건 | 19년 | 133건 |

병행수입물품의 통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확인절차

1단계



병행수입물품에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확인
정식 통관 병행수입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음

2단계



통관표지의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읽기
스마트폰의 QR코드스캐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

3단계



QR코드를 읽은 후 나타나는
통관 정보 확인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정부3.0
Korea 3.0

큰맘 먹고 핸드백을 사고 싶은데..
백화점은 너무 비싸고 병행수입품은 저렴하긴 하지만
가짜가 아닐까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렴한 병행수입물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국민이 함께합니다.

병행수입 물품은 정품인가, 짝퉁인가?

인터넷에서 파는 물건을 보면 ‘병행수입’이라고 해서 같은 브랜드인데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값이하로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살 순 없다.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혹시라도 제품이 파손되면 A/S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병행수입관련 민간단체인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병행수입위원회(TIPA)와 함께 소비자가 안심하고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표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관세청에서 관세법과 상

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실적 등을 확인하여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만 TIPA에서 통관표지를 구매하여 자기가 수입한 병행수입물품에 붙여서 판매하면 된다.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해당 물품에 붙여져 있으며,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통관일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이 가진 통관정보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용한 사례이다. 이 방법으로 위조 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 있는 A/S전문업체를 통해 A/S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병행수입물품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에 있던 12개 A/S전문업체와 TIPA는 소비자의 편리한 A/S를 위해 노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S 업체명, 소재지, 주요 품목 등 관련 정보를 통관표지와 TIPA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에 붙여진 통관표지로 통관정보를 확인한 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또 나중에 물품이 파손되어 A/S가 필요할 때는 통관표지나 TIPA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보고 가까운 업체를 통해 A/S를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 어떻게 확인할까요?



· 병행수입 :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외국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진품을 수입하는 것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TIPA와 공동으로 통관표지가 붙여진 물품에 대해 무작위 샘플구매,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위조 상품이 수입되어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등 병행수입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병행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등 민간과 관공이 힘을 합쳐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뜰쇼핑 병행수입 알아보기



· 병행수입 :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외국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진품을 수입하는 것





관세포탈
고액 체납정리



지긋지긋한 체납은 이제 국세청과 민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관세포탈 고액 체납정리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6,378억원의 체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금년 8월말 기준 관세청 체납액은 6,378억원이다. 89.2%가 관세포탈 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이다. 또 서울세관에서 관리중인 미 납부된 체납세액은 1,603억원이다.

관세청은 1999년부터 자진신고납부제도¹⁾를 도입하면서 선 통관 후, 사후심사·관세조사를 통해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제도를 개편했다. 종전과 달리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인 체납관리를 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전국 세관에서 산재하여 체납 정리하여 오던 것을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서울·부산세관에 체납전담 조직부서로 통합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다.

관세청의 체납행정은 다른 조세기관이나 채권추심기관에 비해 늦은 조직의 구성으로, 체계적·조직적인 체납정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그 납세표준에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것을 소관세관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납자의 재산조사기법은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권 재산의 조사에 한정적으로 실시되었다.

발생된 체납세액은 납부 이행되지 않고 부분 사업장은 단거나, 제3자 명의재산으로 권리 이전되었다. 체납징수율이 떨어지고 재산조사도 체납발생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적인 체납정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국내에선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하여 작년 부터 결손처분제도의 전면 폐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체납자 금융정보 활용 범제화로 체납액 징수관련 법규도 강화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세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때였다.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에서는 관세포탈 범칙조사에 의한 체납액 증가, 체납자의 납세회피·재산은닉 수법의 지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 악성체납 행위를 막기 위한 체납정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에서는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을 운영하고 조사직원·징수직원 간의 실무협의기구를 통하여 고액 관세 포탈자에 대한 조사 착수 시부터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²⁾에 의한 조세채권확보를 적극 추진했다.

밖에서는 채권추심전문기관과의 정보공유실무협의회*를 연2회 운영했다. 또 서울세관 주도로 민간기관까지 포함하여 체납정리와 관련한 정보

2)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한도 안에서 납세확정전 납세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부속세액을 징수하는 제도

와 사례를 공유하여 체납정리에 활용했다.

*김찰청, 서울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NICE신용평가(주), MG신용정보(주)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주된 과제는 관세 포탈자에 대한 피의사건 비밀유지와 부족세액의 징수라는 사회적 공익이 서로 부딪혀서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지지부진하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였다. 하지만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이해를 통하여 조사부서 직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과 조사부서와의 협업한 결과, 금년 6월 중 국산 ○○ 관세포탈자 조사에 따른 입체적 일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7개 업체에 대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집행했다. 무려 11억원 상당의 부동산·금융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였다.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데 모아 체납정리시스템을 구축

5천만원 이상 관세포탈에 따른 추징시, 범칙조사뿐만 아니라 전국 심사부서에서도 사후심사시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확대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국세청의 세적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체납발생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여 징수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체납정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지난 5월 체납행정 미래발전 민·관 실무협의회에서는 국세청의 체납자의 과거 세적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체납발생 초기에 매출채권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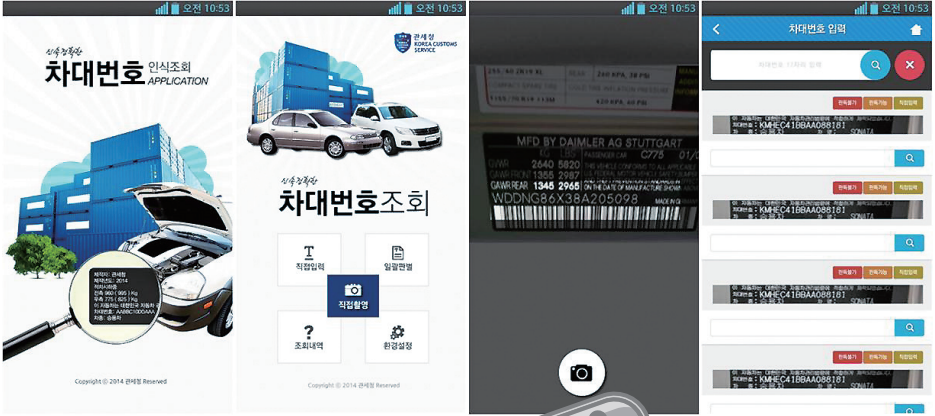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업체를 조사했다. 채납자의 미회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채납정리(3건, 4.6억원)하였던 新재산 조사기법 발굴사례를 외부기관에 전파했다.

민·관협력 체제의 강화된 기반으로 지속적인 재산조사 기법을 공유·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NICE신용평가(주)의 부동산 권리변동서비스(레이더 2.0)활용으로 가족명의로 채납자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채납처분 면탈 죄로 고발한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 보유 중인 채납자의 과거 지방세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은닉재산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재산 조사기법을 공유하여 서울시 등과 체납정리 공동 협업화를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민관기관과의 체납정리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선진적 체납정리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징수율 제고하여 안정적인 국가재정 수입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도난차·압류차 등 문제 중고차량 밀수출 뉴스 이제 지겹다.
관세청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문제 중고차량 밀수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난차·압류차 등 문제차량 밀수출 스마트폰 앱(App) 하나로 원천 차단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수출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난차·압류차·할부차량 등은 수출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이다. 이러한 차들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으로 밀수출을 감행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차량들이 밀수출 될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배에 실어야한다. 물품을 실을 때는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선사에 제출하여 수출신고 수리되었음을 증명하고 물품을 싣는다.

밀수출업자들은 문제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선적단계에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선사에 제출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이다. 먼저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보통 연식이 오래되어 폐

차직전의 차량들을 수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는다. 그리고 해당 수출신고필증에 문제차량의 차대번호를 덧씌우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다. 위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선사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인 것처럼 문제차량을 밀수출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차량 밀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검사율을 일반 수출물품에 비해 5배로 올리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였다. 12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약 2,500여대의 밀수출 차량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밀수출 되어 버린 차량을 적발하여 밀수출업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밀수출 된 차량으로 인해 해당 차량에 권리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고, 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차량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할 해결책이 필요했다.

먼저 수출 중고차량의 약 90%가 선적되는 인천항에서 중고차 수출 프로세스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차량운반 전용선에 선적하는 중고차의 경우 민간 검수업체에서 차량의 차대번호를 100%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민간 검수업체가 선적시점에 확인하는 차대번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수업체에 이와 같은 제안을 했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검수업체는 선적차량의 차대번호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검수표에 수기로 적고 있었다. 1대당 평균 검수시간은 30초 정도에 불과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출항 후 약 1주일에 걸쳐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기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 17자리를 입력하면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지만, 차량 검수시 일일이 입력하여 확인하려면 물류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스마트폰 앱(App) 이었다. 명함을 촬영하면 텍스트로 인식하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구분해주는 앱처럼 차대번호를 촬영해서 차대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면 어떨까? 인식된 차대번호로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고, 데이터를 저장한 후 검수업체가 검수보고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검수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즉시 민간 검수업체에 제안했고, 검수업체와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여 중고차량을 검수하기로 협력했다. 관세청은 즉시 차대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앱(App) 개발을 시작했고 올해 10월 중 개발된 앱을 이용하여 수출 차량 검수 및 검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세관은 선적단계에서 수출신고필증 위조를 통한 문제차량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검수업체는 그동안 수작업에 의한 검수보고서 작성시간을 단축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밀수출 루트 차단으로 문제차량의 유통경로가 없어져서 도난차량 감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물류의
병목현상

화물을 옮기는 데 필요한 파렛트, 같이 쓰면 좋는데
규격이 달라서 빌려줄 수도, 빌려쓸 수도 없네.

항공물류의 병목현상 관세청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에서 물류 신속화의 답을 찾다.

2시간 걸려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10분 내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관세청은 정부3.0을 기반으로 효과 없는 탁상공론, 전시행정을 버리고
항공물류 현장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병목현상을 해결하여 인도장(화물
을 찾아가는 장소)에서의 항공물류 처리시간을 2시간에서 10분으로 단
축시키는데 앞장섰다.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시간을 연간 108만시간 단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물류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200억원 상당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차량 공회전 방지로 유류비 48억 절감에
따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고 파렛트 공동 관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영세 물류기업 종사자
들의 근로환경을 크게 개선해 국민 행복지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세관이 민원해결을 위해 인천공항의 6개 화물터미널을 방문했을 때,

인도장은 너무나 혼잡했다. 항공사에서 화물적재용 파렛트(화물을 운반·저장하기 위한 받침대)를 인도장에 갖다 놓으면 다시 운송업체의 화물차량 기사가 운송업체 파렛트로 옮겨 실음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화물인도 지연, 차량대기시간 증가, 주차장 혼잡, 차량 공회전에 따른 공해발생, 재적재 작업을 위한 운송 종사자의 근무여건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과거에도 물류 현장의 당사자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에서 여러 차례 인천공항 공동 파렛트 도입(항공사와 운송업체가 파렛트를 공동으로 사용)을 추진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했다. 관련 민간업체 모두가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파렛트 규격 상이, 파렛트 소유권, 관리주체, 사용권한, 회수문제, 초기 구입비용 등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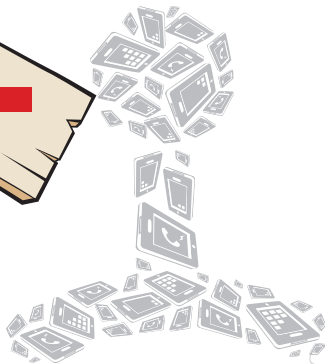
우리는 문제 해결형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관 주도로 지난 2년간 정부·민간 구분 없이 과제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 이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항공사, 조업사, 포워딩협회, 보세운송협회, 창고운영인 등)의 의견을 조율하고, 물류 전문가 자문 및 연구기관 컨설팅을 통해 항공사와 운송업체의 파렛트 규격을 표준화하여 공동 활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컨소시엄을 통한 예산확보!

이 사업의 성패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세관에서는 2013년 7월 인천시·공항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그 결과 국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물류전문 교수 4분이 참여한 ‘공동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하였다. 또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최적의 운영방안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다함께 노력했다. 파렛트 공동화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컨설팅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물류기업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민간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우리나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세관은 앞으로도 민간분야의 애로사항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다.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에서 개선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면 지속적인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항공물류 개선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에 대응하여 손쉽고 빠른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민·관 협력으로 해외직구 불법반입 차단

해외직구 늘어가는데 부작용은 없나?

“LG전자의 55인치 스마트TV 국내 인터넷 최저가는 250만원. 하지만 미국가격은 절반에 불과한 130만원입니다” (14.08.29. MBC news)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특히 국내 구매자가 해외쇼핑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인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일반인으로 다양하다.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해외직구물품들…… 과연 저렴한 가격, 우수한 품질 등 장점만 있고 탈세, 국민건강 위협,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 등 문제점은 없을까?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러한 해외직구물품의 문제점에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정부 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기반을 두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민·관 협력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나 가족·친인척·동호회원·인터넷 사이트 회원 등 2,81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21,790회에 걸쳐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자 40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약 3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판매했다.

이들의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부 'A씨'는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아기엄마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세울의 독일산 분유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4세 미만 아기 등 가족명의로 친지 등 다수인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 수입하여 주변 아기엄마 등에게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둘째, 판매업자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외직구로 몰카를 판매한다고 홍보글을 게시하고 주문 받은 뒤, 중국으로부터 몰카를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확인을 구비하지 않고 불법 수입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

셋째, 짝퉁 전문 판매업자 'C씨'는 짝퉁 물품을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명의로 자가소비용인 양 위장하여 소량씩 분산하여 불법 수입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판매하였다.

넷째, 카페·블로그 운영자 'D씨'는 카페·블로그 회원 및 가족명의로 컴퓨터 부품, 수영용품을 분산 수입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아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들은 관세법상 그 해 물품 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했다. 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다.

불법적 해외직구를 막기 위한 노력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행위가 날로 지능화·다양화(해외서버, 폐쇄적인 사이트인 개인 카페·블로그 이용, 불법유출 개인정보 이용 등)되고 있는 현실에서

첫째, 관세청 및 공항세관(김포세관)과 통관부서·정보담당부서·조사단속부서와의 상호 협업으로 입체적 조사단속 능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서울본부세관 자체적으로는 해외직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심층 정보분석(19건)을 통하여 수사에 적극 활용하거나 관할지 세관에 알렸다. 또 기획단속반 회의개최, 외부 PC망 설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자체 단속능력을 강화했다.

셋째, 경찰청·전파관리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사이버범죄 경향 공유·사이버범죄 심포지움 참석·정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 압수수색 집행·마약류 등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7개) 등 타 기관과의 공조수사 체

제를 강화했다.

넷째, 양해각서(MOU업체)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인터넷포털 등 민간 업체와 건전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정보 교류를 통한 민·관 협력으로 해외직구 불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대응 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해외직구에 대하여는 신속통관 등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그리고 상용물품을 분산 반입하는 등 해외직구 불법행위는 항상 단속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사례별 유형도 ①~②〉



〈사례별 유형도 ③~④〉



관세청 정부 3.0 협업 우수사례집

인 쇄 일 : 2014년 10월

발 행 일 : 2014년 10월

발 행 처 : 관세청

발 행 인 : 관세청장

기획편집 :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주 소 :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481-771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관세청
협업 우수사례집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